

美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韓, 수출·내수 현안 대응 시급

금리격차 따라 자본유출 부담완화 1400원대 환율 지속... 내수 영향 "경제상황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이번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시장의 예상처럼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가 좁혀져 자본유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00원대로 높고, '탄핵 정국'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시기는 더더욱 길 수 있다. 내수(투자·소비)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은 오는 17~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앞서 연준은 9월 기준금리를 5.25~5.5%에서 0.5%p 낮춘 뒤 10월 0.25%p를 추가 인하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4.75%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이날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p 낮출 확률을



지난 9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워싱턴의 연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97.1%로 내다봤다. 인하할 확률은 한 달 전 61.9%에서 일주일전 86%까지 오른 뒤, 이날 기준 97%까지 올랐다.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진 이유는 우선 고용시장이 견고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비농업고용지수는 22만7000명으로 지난 9월(25만4000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실업률도 4.2%로 우려하는 수준(4.4%)보다 낮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5%p 내린 뒤 "정책 기조를 적절히 재조정하면 완만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까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노동 시장의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금리인하와 별개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최대 2%p까지 벌어졌던 한·미간 금리격차는 11월 기준 1.5%p 축소됐다. 금리격차가 줄어들어 비슷해지면 자본유출 부담이 줄어든다.

문제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날 오후 3시 53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36.70원을 나타냈다. 지난 주말 대비 1.50원 올랐다. 이 상황에 내수(투자·소비) 회복을 위해 금리를 인하할 경우 원화 가치가 낮아져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자본유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여기에 현재 우리나라는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정치·경제·안보 등에 대한 투자자들

의 우려로 한국증시가 실제보다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은 지난 8월부터 6달 연속 순유출됐다. 국내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을 우려한 영향이다. 여기에 정치적 비상계엄·탄핵 사태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었다.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외국인 매도세는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내수회복이 더뎠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평가의 주된 근거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부진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였다. '탄핵 정국'은 악재가 널린 상황에서 국내 정치 불확실성까지 높였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글로벌 지정학은 밀릴의 한 가운데 들어섰고, 반도체 업황 둔화와 수출통제 등의 부담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는 게임발동과 해제, 지도자 공백이라는 초현실적 상황을 맞이해 주요 기업들의 실적 하향과 밸류에이션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나우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1면 '반도체법 등 친기업...'서 계속

신년 경영전략 수립 분주 경제과장 최소화 '한뜻'

회의엔 각 사업본부 경영진과 해외 거점 지역 대표, 법인장이 총출동한다. 구 회장은 지난 12일 사장단 협의회를 주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구 회장은 미래 성장 사업과 관련해 '빠른 실행력'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SK도 탄핵 이후 국내 상황이 그룹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은 매년 6월 경영전략회의, 9월 이천포럼, 10월 CEO 세미나 등을 통해 중장기 경영전략을 점검하고 있다.

최근에는 계엄 사태 직후 최창원 수펙스추진협의회 의장 주관으로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한 대책 회의를 열고, 이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대차는 이번주 해외 권역별 본부장회의를 개최한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내년 사업 전략 논의에 집중한다. 정 회장은 연초 신년사를 위한 타운홀 미팅도 수시로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들도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다.

17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초청 경제단체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재계는 탄핵 정국에 직면한 기업의 어려움을 알리고 입법 지원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1면 '한동훈 정상임무 불가'서 계속

"계엄이 잘못이라 해서 거야 폭주 정당화 안돼"

또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재판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대표는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비판해 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당원 동지들과 우리 당직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따로 질문을 받지 않고 국회 본청을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했다. 한 대표에 날을 세우는 윤상현 의원도 한 대표를 배웅했다. 한 대표의 차량은 한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국회 소통관 앞으로 향했다. 친한계 의원과 당직자들도 차량과 함께 이동하며 배웅했다. 200여 명의 지지자들을 한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며 아쉬워했다. 한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 저를 지키려고 하지 마시라.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정치적 혼란에 밸류업 기대감 '뚝'... "세제혜택 등 동력 잃어"

금융 등 밸류업 대표주 회복세 더디 "내년초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도"

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탄핵 정국과 세제혜택 백지화 등으로 인해 동력을 잃고 있다. 저조한 기업 참여율을 올릴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한 가운데,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도 빠지는 모습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밸류업 대표주로 꼽히는 금융·증권 종목들의 주가 회복세가 특히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12·3 계엄사태 이후 'KRX 은행지수'와 'KRX 증권지수'는 각각 10.08%, 5.53%씩 떨어지며 직격타를 맞았다. 13일 종가(2494.46포인트) 기준 코스피는 계엄사태 직전이었던 3일 종가 2500.10에 근접하는 등 회복세를 보였지만 금융주들은 회복세가 더딘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지수는 상승 마감한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되는 모습이지만,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엇갈리고 있다. 밸류업이 윤 정부가 연초부터 추진해 온 정책인 만큼 정권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밸류업 유인책으로 꼽히던 세제혜택도 사실상 무산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김대중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밸류업 등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크게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이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이 취임한 뒤에는 환율이 오르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높다"고 진단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시장에서 요구했던 밸류업 관련 세제혜택들은 빠진 모습이다. 당초 정부에서는 ▲주주환원 증가액 5% 법인세 세액공제 ▲2000만 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내놨지만 통과된 수정안에서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혜택 등이 빠졌다. 더불어 중견기업들이 기대하고 있던 기업상속공제 확대도 좌초됐다. 이번 세제 인센티브는 애초에도 강도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마저도 삭제 처리되면서 기업들의 참여도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하은 기자 godhe@

수출, 에너지 수급 등 실물경제 영향 제한적

산자부, 민생·경제안정 과제 논의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도 현재까지 우리나라 수출, 외국인투자, 에너지 수급 등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각 실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실물경제 동향을 재점검하고, 민생과 경제안정을 위해 신속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현재까지 수출, 외국인 투자, 에너지 수급 등 실물경제는 그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업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출, 생산 등 부문별 특이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

고, 특히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 우려도 높은 만큼 2025년도 예산 집행 계획을 충실히 준비해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내수 진작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유통 부문도 면밀히 살펴나가기로 했다.

또 긴급 상황에 대비해 무역보험 등 수출지원 대책, 동절기 대비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와 석유·가스 비축 물량 확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외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체대미 아웃리치(대외협력활동)를 계속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은 "경제주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중요하다"며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민생과 경제안정을 위해 맡은 업무에 더욱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